

# 아베 일본의 국가진로

전진호(미래전략연구원 연구위원/광운대학교 일본학과)

## 1. 머리말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이끄는 일본의 신정부가 출범했다. 제 90대 총리인 아베는 전후 세대 정치인으로서 최초의 일본총리가 되었다.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문제 해결과정에서 대북 강경정책을 통해 국민의 폭 넓은 지지를 얻은 아베총리가 21세기 일본을 어떠한 방향으로 이끌지에 대해 일본은 물론 주변국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960년 미일 안전보장조약의 개정을 이루어낸 기시 노부스케(岸信介) 전 총리의 외손자이며, 아베 신타로(安倍晋太郎) 전 외상의 아들인 아베는 민족주의적 성향이 강한 전후세대 정치인의 대표적인 인물이다. 아베총리가 이끄는 일본이 어떠한 국가를 지향할 것인가에 대해 일본은 물론 한국에서도 다양한 측면에서 논의가 전개되고 있다. 일본의 민족주의화, 우경화는 지속될 것이나, 고이즈미의 일본과는 달리 한국, 중국 등의 주변국관계는 상당한 정도 정상화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이다.

1990년대 이후, 전후세대 정치인이 국회 및 내각에 진출하면서 일본정치의 주류를 형성하였으며, 아베정권 역시 애국주의적 성향이 강한 전후세대 정치인이 정권의 중추를 형성하고 있다. 따라서 아베 일본은 전반적으로는 보수화, 우경화의 경향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고이즈미 정권기에 최악의 상황을 연출했던 주변국관계에는 상당한 배려를 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대중국 관계는 일본 내에서도 조정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본고는 아베정권의 출범을 맞아 아베 일본이 어떠한 국가진로를 채택할 것인가를 아베정권의 국내정책, 외교정책, 그리고 한일관계를 중심으로 전망해 본다.

## 2. 아베 일본의 국내정책

고이즈미 일본이 구정치 타파와 행·재정 개혁을 중시이념으로 한 개혁정권이었던 것에 비해, 아베 일본은 개헌추진과 애국주의 교육을 축으로 하는 민족주의 정권이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아베총리는 헌법 및 교육기본법의 개정을 통한 '강한 일본'의 건설을 신정부의 중심정책으

로 채택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전후세대 최초의 총리로서 국민의 폭 넓은 지지 속에 아베정권이 출범했지만, 아베 일본이 순항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우리의 목소리가 큰 것도 사실이다. 이는 고이즈미 개혁의 후유증인 사회적, 경제적 격차의 문제, 재정난의 악화에 따른 소비세 인상문제, 한중 등 주변국과의 관계정상화 등의 난제가 산재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권 초기의 정책방향과 이에 대한 국민의 평가가 아베 일본의 장래를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신정부의 국내정책은 고이즈미 정권의 구조개혁 노선을 유지할 것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고이즈미 정권은 국민여론의 절대적인 지지를 기반으로 파벌정치의 지배력을 약화시켜 총리의 강력한 리더십을 확립하였으며, 우정공사, 도로공사 등의 공공기관의 민영화를 통해 정부조직의 슬림화, 효율화를 지향하였다. 이러한 고이즈미 정권의 개혁정책의 대부분을 아베정권이 승계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신내각의 인적구성이나 자민당 당 3역의 면면을 보면 민족주의적 성향이 강한 전후세대 정치인이 폭넓게 포진하고 있으며, 따라서 헌법개정을 통한 일본의 안보역할의 확대, 교육기본법 개정을 통한 애국주의 교육의 강화가 신정부의 중심이념으로 자리 잡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아베 일본의 제1의 국정과제는 헌법개정을 통한 ‘보통국가화’라고 할 수 있다. 일본의 경제력에 걸맞은 정치적, 군사적 발언권 및 영향력을 확보하고, 국제사회의 중심 국가가 되기 위해서 헌법개정은 필수적이다. 따라서 아베 일본은 개헌논의를 급진전시켜, 집단적 자의권의 행사를 명문화하고 방위청을 성으로 승격시킴과 동시에 국외에서의 자위대의 독자적인 군사활동을 뒷받침하는 법적 조치들을 순차적으로 이루어 나갈 것이다. 1990년대 중반 이래 추진되어 온 보통국가화는 민족주의적 색채로 무장한 아베 일본에서 급물살을 탈 것이다.

경제정책에 있어서도 아베 일본은 고이즈미 정권의 개혁노선을 전반적으로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베총리 자신은 경제문제에 그다지 밝지 않아 신뢰할 수 있는 전문가에게 경제정책을 일임하고, 다양한 재계의 조언그룹을 활용해 재계의 요구를 수용하여 안정적인 성장세와 적은 정부를 지향하는 경제정책을 실시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것처럼 고이즈미 개혁의 후유증인 경제양극화 문제의 해결, 사회안전망 확충 등의 과제와 함께, 재정적자 해소를 위한 소비세인상 문제가 시급한 과제로 부상해 있다. 아베총리는 자민당 총재 선거 기간 중에도 소비세인상 문제에 대해서는 명백한 언급을 회피하여 왔다. 이는 소비세 인상이 지닌 파괴력 때문일 것이다. 따라서 소비세 인상문제는 중요한 정책과제로 부상될 것이나 논의의 시기는 빨라야 내년 7월의 참의원선거 이후가 될 것이다.

교육정책은 교육기본법 개정을 통한 애국심 함양을 중점적인 정책으로 제시하였다. 아베총리는 역사교과서 기술 및 검정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일본의 앞날과 역사교육을 생각하는 젊은 의원들의 모임’의 창설을 주도하였으며, 아베총리 자신이 사무국장을 맡기도 하였다. 또한 일본 역사를 부정적으로 기술하는 이른 바 ‘자학사관’ 교육의 폐지를 주장하여 왔으며, 도쿄재판은

정당하지 않으며 일본군 위안부에 대해서도 “언론이 만들어 낸 허구”라는 등의 역사인식을 보여 왔다. 이러한 아베총리의 역사인식이 애국주의, 국가주의 교육의 강화로 연결되고 있는 것이다. 교육문제에 있어서는 한일 및 한중간의 마찰이 재연될 가능성도 높게 평가된다.

### 3. 아베 일본의 외교정책

국내정책과는 다르게 아베 일본의 외교정책에서는 일정한 변화가 예상된다. 고이즈미 정부가 추진해 온 미일동맹의 강화에 의한 일본의 정치적, 군사적 역할 확대노선은 대체로 유지되어 미일동맹은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대미기축외교도 유지될 것이 확실하다. 아베총리는 관방장관 시절부터 친미적 자세를 보여 왔으며, 미국도 아베총리를 우대하여 왔다. 2004년 아베의 방미 시에는 백악관에서 기자회견을 하는 등의 파격적인 대우를 받기도 하였다. 금년 북한의 미사일발사 이후 행해진 미일협회의 일본측 창구도 아베총리였다. 아베총리는 전후세대 정치인답게 대등한 미일동맹을 주장하여, 미일동맹을 보다 쌍무적인 동맹으로 발전시켜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해 왔다. 국제사회에서의 일본의 능력과 역할확대를 위해서는 미일동맹이 과거와 같은 주종의 관계가 아닌 미일이 책임과 권한을 분담하는 형태로 발전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미 기축외교의 지속과는 다르게 일본 외교정책 중 가장 큰 변화가 예상되는 분야는 동북아 외교이다. 고이즈미 일본이 동북아 외교를 경시해 온 것에 비해 아베 일본은 한중과의 관계정상화라는 부담을 안고 출범하였다. 동북아 외교의 복원에 대해 재계 등의 강력한 요청을 받고 있으며, 일본정부로서도 한중관계의 냉각화는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아베 일본은 한중과의 관계정상화를 주요 외교정책으로 추진할 것이다. 지난 1년여 단절된 한일, 중일 정상회담의 재개를 통해 아베 일본은 동북아 관계의 정상화를 꾀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일본과 한중 양국관계가 지속적으로 개선될 전망은 그리 밝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지난 5년간의 일본의 주변국관계를 악화시킨 것은 외교의 장에서의 대립이나 문제가 아니라 일본총리의 야스쿠니(靖国)신사 참배문제였다. 다시 말해 외교의 문제가 아니라 내정의 문제가 외교관계의 악화를 초래한 것이다. 따라서 아베 일본의 출범 이후 일정한 관계정상화가 이루어지더라도 야스쿠니 참배문제는 일본의 주변국관계를 악화시키는 변수로 여전히 상존하고 있는 것이다. 총리 취임 이전에 한 차례도 야스쿠니를 참배하지 않았던 고이즈미 총리와는 다르게, 아베 신총리는 매년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해 왔으며, 관방장관 시절 총리의 야스쿠니 참배를 지지해 왔다. 따라서 아베총리가 주변국관계 정상화를 위해 일시적으로 야스쿠니 참배를 유보할 수 있지만, 일본 국내정국의 변화에 따라, 혹은 선거를 위해 야스쿠니 참배를 강행할 가능성은 남아 있는 것이다. 현재 논의 중인 야스쿠니 신사의 A급 전범 분사문제나 제3의 추

도시철 건립문제 등의 새로운 해결책이 제시되지 않는다면 야스쿠니 문제는 일본의 주변국관계의 발목을 잡을 악재로 남아 있다.

대북정책에 있어서는 아베총리 자신의 트레이드마크인 대북 강경기조를 유지, 강화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아베정권의 관방장관은 납치문제 담당상을 겸임하며, 또한 납치문제를 전담하는 총리보좌관을 별도로 임명한 것에서도 알 수 있는 것처럼 납치문제의 해결은 아베 일본의 주요 외교과제로 설정되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는 대북 강경정책을 취할 것이나, 정권 출범 후의 북한과의 초기 접촉과 외교적 성과가 향후의 대북정책의 방향을 설정할 것으로 보인다. 사실 지금의 아베총리를 만든 것은 북한의 납치자 문제였다. 고이즈미 정권의 관방부장관 시절 고이즈미 총리와 함께 방북하여 납치자 문제를 전담하면서, 대북 강경정책을 주도하며 40대 후반의 소장의원이 총리후보로 급부상하게 된 것이다. 납치문제 논의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납치 의원연맹 결성을 주도하는 등 아베총리는 총리 취임 이전부터 강경 대북정책을 주도하였으며, 이러한 정책기조는 아베 일본에서도 유지될 것이 명백하다. 물론 고이즈미 총리의 평양방문과 같은 획기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할 가능성도 존재하나 북핵문제가 정체하고 있는 현시점에서 아베총리가 방북을 결심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다고 판단된다. 이런 점에서 북핵문제와 함께 납치자 문제는 일본이 한국과 대립 각을 세우게 되는 악재로 작용하고 있으며, 야스쿠니 참배 등의 일본의 국내문제가 아닌 북한문제가 한일 간의 새로운 대립의 불씨가 되고 있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외교, 안보정책의 입안 및 집행과정에서 수상의 리더십을 강화해 나가는 조치들이 시행되었다. 외교, 안보정책 수립과정에서의 관저의 리더십의 확대는 고이즈미 정권 이래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지만, 아베총리는 미국의 국가안전보장회의(NSC)와 같은 강력한 권한을 보유한 일본판 국가안전보장회의 창설을 위해 국가안전보장담당 보좌관을 임명하였다. 일본판 NSC는 수상이 의장이 되며 관방장관, 외상, 방위청장관 등이 주요 멤버로 참가하며, 독자적 정보분석과 정책입안이 가능한 기관으로 운용될 것이다.

#### 4. 아베 일본과 한일관계

아베 일본의 출범에 따라 한일관계 정상화에 대한 기대가 높다. 아베 일본은 주변국관계 정상화를 주요 외교과제로 삼고 있으며, 전반적인 한일관계가 재조정될 가능성은 크다. 또한 일본으로서는 대 중국 견제를 위해서도 가치와 체제를 공유하는 한국이 필요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한일관계 정상화에 대한 지나친 낙관론은 금물이다. 신정부 출범과 동시에 일본은 일시적으로 한일관계와 중일관계 정상화를 위한 조정에 들어갈 것이며, 단기적으로 한일관계는 해빙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이러한 조정과 해빙이 일시적인 현상으로 그치지 않고 향후 수년

간 지속될 것인가 하는 점이 문제이다. 아베 일본은 고이즈미 일본을 넘는 민족주의적이고 보수적인 성향의 정책을 양산할 것이며, 이러한 일본의 내정이 한일 양국관계를 냉각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아베 일본의 강성 우파내각의 출범에 따른 자민당과 청와대의 이질감은 더욱 더 커질 것이며, 2007년의 한국의 대선과 일본의 참의원 선거는 한일 양국의 포퓰리즘 정치의 발호를 불러올 수도 있다. 따라서 한일 양국의 관계정상화가 일시적인 해빙이 아닌 장기적인 우호관계의 재구축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한일 양국이 지난 5년간의 인식의 갭을 어떻게 메우느냐는 실질적인 발전의 조건이 필요할 것이다. 구체적인 협력의 내용과 상호이해가 전제되지 않는다면 장기적인 한일관계의 안정화는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앞에서도 지적한 바 있지만, 한일관계 악화의 원인제공은 한일 양국의 국내문제에서 촉발된 측면이 강하다. 따라서 한일관계 정상화를 위한 조치들이 실질적인 관계정상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양국의 국내 현안문제가 외교의 발목을 잡지 않도록 양국이 관리하고 통제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또한 노무현정권과 아베정권이 각각 레임덕과 정치적 리더십이라는 난문을 어떻게 돌파할 수 있는가 하는 점도 향후의 한일관계를 규정하게 될 것이다. 아베총리 자신은 한국과의 관계정상화에 강한 의욕을 가지고 있다고 알려져 있다. 그러나 총리 취임 전에 한 차례도 한국을 방문한 적이 없는 고이즈미 총리와는 다르게 아베총리는 이미 수차례 한국을 방문해 한국에 대한 이해의 폭이 넓으며, 총리부인이 박용하의 팬이며 한국통이라는 사실만으로 한일관계가 장기적으로 안정되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호재들이 실질적인 양국관계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들로 뒷받침될 때 비로소 한일 양국관계의 장기적 안정화가 가능할 것이다.

## 5. 마무리

2007년의 일본 참의원 선거와 한국의 대선에 이르는 시기가 한일관계의 미래를 규정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따라서 한일 관계정상화를 위해서는 일시적인 선언이나 조정이 아닌 보다 구체적인 접근이 필요한 시점이다. 한일 양국이 공유하는 가치와 체제라는 추상적인 차원을 넘어서, 한일 양국이 공유하는 미래, 한일 양국이 공유할 수 있는 담론의 개발이 요구되고 있다. 즉, 한일협력이라는 한일 공동의 집을 어떠한 가구로 채울 것인지, 다시 말해 한일협력의 구체적인 내용을 무엇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 양국이 실질적인 합의를 만들어가야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야스쿠니에 합사된 한국인 유골의 반환문제, 한일 시민 및 학생교류의 전면적인 확대, 문화개방 등이 실질적인 합의를 만들어 갈 수 있는 구체적인 대안들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실천이 결여된 선언이나 일시적인 무드의 조성은 한일관계 정상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한일 국교정상화 40여년의 역사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다.

한국의 대일본 인식에도 일정한 변화가 필요하다. 1990년대 중반 이후의 일본의 급속한 변화

를 한국은 우경화, 군사대국화로 인식하며 불안해하고 있다. 일본의 변화가 일정한 우경화, 군사화의 경향이 있음은 사실이나, 이러한 변화를 제2의 식민주의나 제국주의, 군국주의로 인식하는 것은 지나친 대응으로 보인다. 일본의 변화가 우리의 안보를 해치지 않도록 상호이해와 신뢰의 폭을 넓혀 나가면서 일본의 변화가 우리에게 유리하게 작용하도록 하는 점이 더욱 중요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최근의 일본의 변화를 기정사실로 인식한 후 이에 대한 냉철한 대응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1990년대 중반 이후의 일본의 변화를 적대적이고 위협적인 변화로만 인식해서는 일본의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또한 일본이 변화하기만을 기다려서도 안 될 것이다. 한일 국교정상화 이후 41년, 우리가 바라는 정도로 일본은 변화하지 않았다. 앞으로도 한중 등의 압력에 의해 일본이 극적으로 변화할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우리는 일본이 변화할 때까지 기다리는 수동적인 접근이 아니라, 일본이 변화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노력이 필요한 것이다. 일본이 한국의 가치에 매료되어 한국으로 접근해 올 수 있도록 한국의 가치, 한국의 매력을 높이는 노력이 필요한 것이다. 물론 한류도 이러한 매력의 하나이다.

마지막으로 일본의 변화를 긍정적으로 활용하는 자세가 일본이 더 큰 변화를 스스로 이루어 낼 수 있는 동력으로 작용하며, 이는 일본이 주변국에 대한 약속을 실천할 수 있게 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채찍만이 아닌 채찍과 당근의 병행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중국은 중일 정상회담의 조건으로 총리 및 정부 주요관계자의 야스쿠니 참배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중국으로서는 야스쿠니 신사로부터 A급 전범을 분사한다면 총리의 야스쿠니 참배를 용인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한국은 A급 전범을 분사해도 총리의 야스쿠니 참배에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식민지 지배를 경험한 우리로서는 야스쿠니 신사의 역사관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일본이 이러한 우리의 요구를 한꺼번에 수용할 가능성은 매우 낮으며, 따라서 한 단계 한 단계 일본의 변화를 유도하는 것이 한일 간의 현안문제들을 풀어가는 해법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내용 문의 :

**미래전략연구원** <http://www.kifs.org>

주소 서울시 중구 서소문동 39-1 신아빌딩 704 우)100-813 / 전화 (02)779-0711 / 팩스 (02)779-0718 / 메일 kifs@kifs.org